

제 **15** 호 2015년 상반기 (1.1 ~ 6.31)

의정 소식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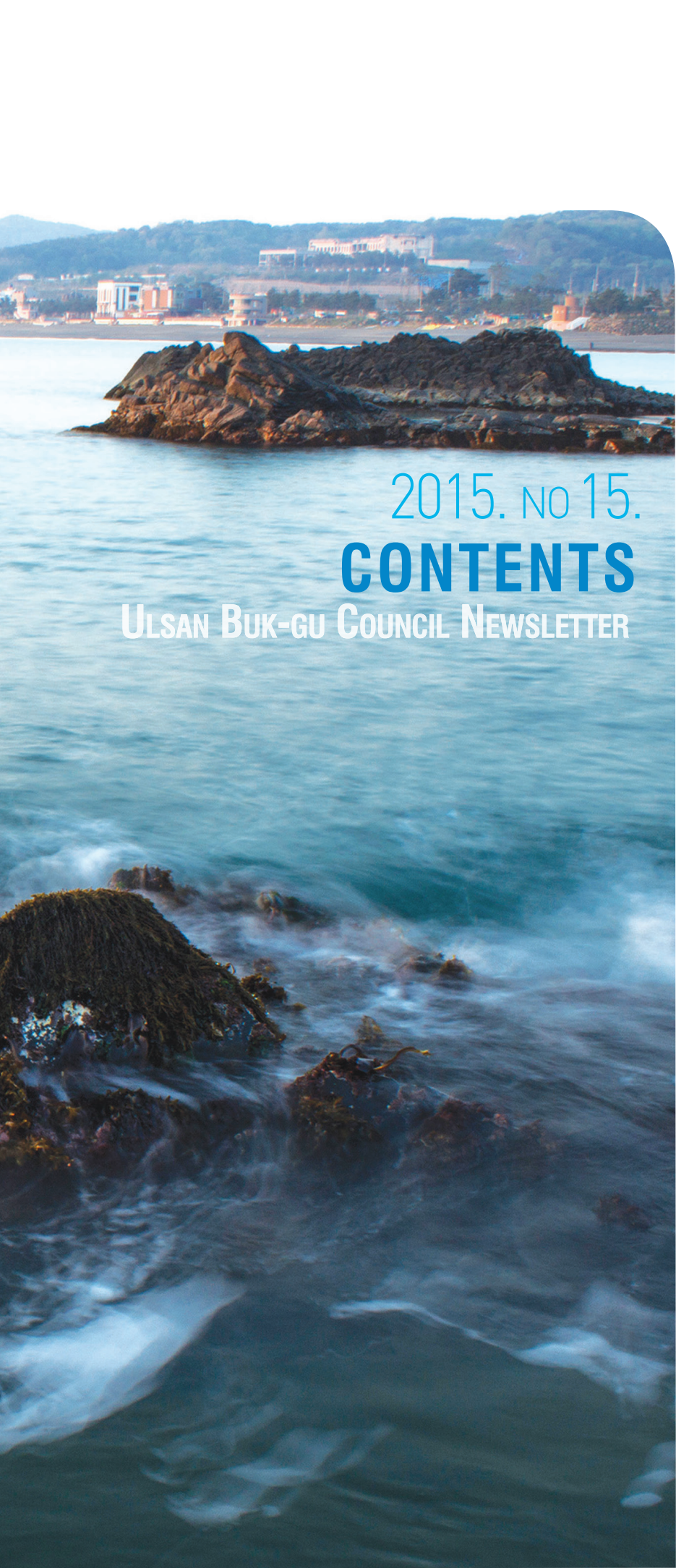
구민 복리증진과 복구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2015. No 15. CONTENTS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 05 의원현황 및 정수
- 06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 07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안건처리현황
- 08 주요의정활동
 - 제 152회 임시회
 - 제 153회 임시회
- 14 현장 속으로
- 21 5분 자유발언
- 36 언론에서 바라보는 북구의회
- 43 2015년 상반기 포토의정
- 51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표지설명 : 화동못 수변공원

- 발행일 2015년 상반기 제15호
- 발행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회의장
- 편집인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장
- 발행처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
-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1004-1)
- 전화 052) 241-8975
- 홈페이지 <http://council.bukgu.ulsan.kr>

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찾아가는 의회
- 발로 뛰는 의원
- 신뢰받는 의정

북구의회는 구민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의원현황 및 정수

제6대 [전반기] 북구의회 의원현황



의장
성명 이수선
연락처 010-2833-1929
선거구 농소2·3동
“주민이 행복한 사람이 살기좋은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부의장
성명 강진희
연락처 010-8610-4748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엄마의 마음으로 안전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성명 이상욱
연락처 010-5535-2362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여가와 문화가 풍성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의원
성명 안승찬
연락처 010-6587-1287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주민과 함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북구로 가꾸겠습니다.”



의원
성명 윤치용
연락처 010-5231-7321
선거구 농소2·3동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건강하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의원
성명 백현조
연락처 010-3801-8364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건강하고 활기찬 북구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
성명 정복금
연락처 010-3446-2002
선거구 비례대표
“아이들이 행복한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정수

계	가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농소3동)	다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7	2	2	2	1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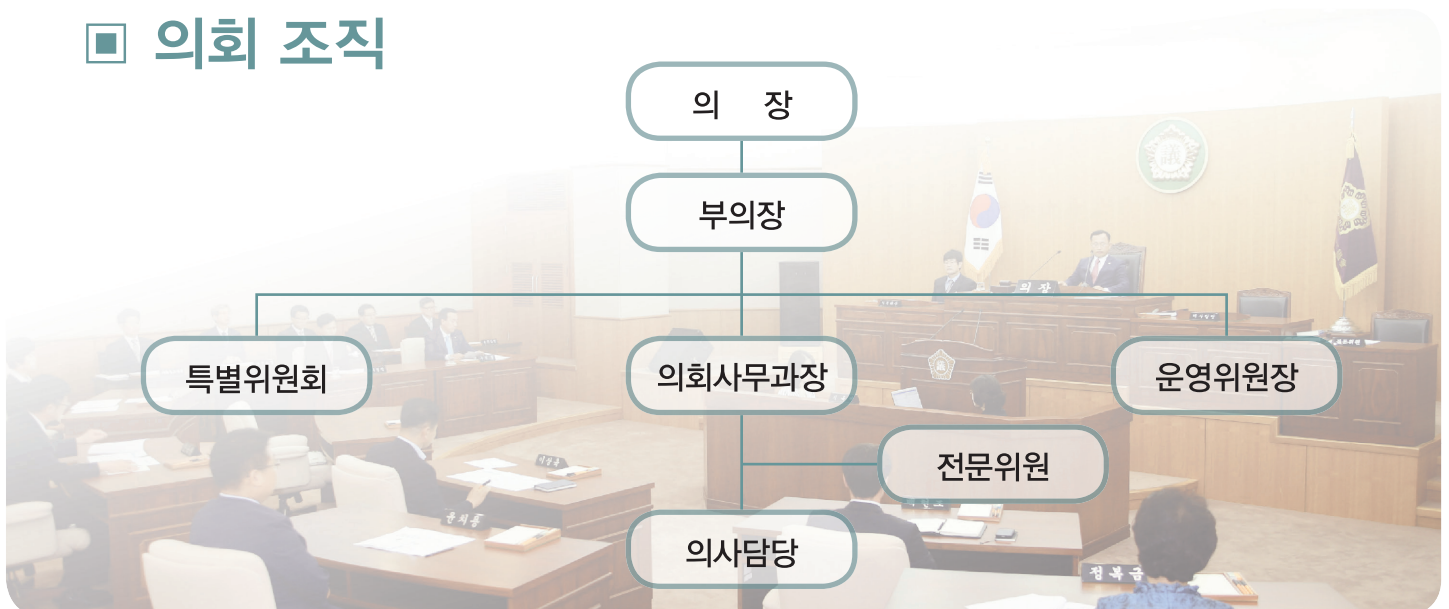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ULSAN Buk-gu Council History

- 1997. 7. 15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1998. 3. 1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1998. 7. 7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0. 2. 21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2. 7. 9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4. 7. 1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4. 7. 1 ~ 2018. 6. 30



의회 조직



2015년 상반기 주요 안건처리



회기운영 현황 (2015. 1. 1 ~ 6. 31)						
구 분	계		임 시 회		정 령 회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2015년 상반기	2	26	2	26	-	-

안전처리 현황											
회 수	일 수	계	예산안	결 산	조례안	동의안 (승인)	결의안	보 고	질 문	5분 자유발언	기타
제152회 (2015.1.29~2.11)	14	14			5			1		3	5
제153회 (2015.4.20~5.1)	12	26	1		19					3	3
합 계	26	40	1	0	24	0	0	1	0	6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 152회 | 임시회 | 2015. 1. 29. ~ 2. 11. (14일간)



제152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1월 29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박천동 북구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다.

이수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만이 아닌 구정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진희 부의장은 ‘서민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서민증세, 무차별적인 서민세금 폭탄 즉각중단하라!’라는 주제로, 윤치용 의원은 ‘수명다한 원전가동 중단 및 폐기촉구’, 안승찬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주제로 발언하였다.

한편, 제152회 북구의회 임시회는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중국 비성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의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53회 | 임시회 | 2015. 4. 20. ~ 5. 1. (12일간)



제153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4월 20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박천동 북구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임시회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19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진희 부의장은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폐기촉구’에 관한 내용을, 안승찬의원은 ‘4. 24 민주노총 국민 총파업’에 대해 발언하였다.

한편 이수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다양한 해법으로 살펴 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주요 안건처리 현황

제152회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중국 산둥성 비성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 원안가결

※ 비성시는 국제우호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교환 방문 및 우호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양 도시의 상호발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 체결로 양 도시의 관계를 격상하여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2020년 울산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의견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수립된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거환경개선 사업 예정 구역인 북구A-1 (호계구역)은 2015. 2. 1.자로 일몰시기가 도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이 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 제91조의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통장교육 의무화 및 미 이수 시 통장의 신규 위촉과 연임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고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조례의 법적 근거인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명 및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함.

제153회

임사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5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수요를 반영,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을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 개정 (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천재지변에 따른 지방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를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국세징수법」과 같이 1개월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 개정 (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보완 및 불필요한 규제 조항의 정비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 개정 (2014. 11. 29. 시행)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 구 조직개편 (2015. 1. 1. 시행) 에 따른 담당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및 융자 사업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 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3. 1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 원안가결
※ 「경관법」 (2014. 2.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원안가결 **[강진희 의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5. 8. 4. 개정·시행 예정됨에 따라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백현조, 이상육 의원]

※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50조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군수·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예산 지원 근거,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이에 따라 구청장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백현조, 이수선 의원]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 ▶ 원안가결 [정복금, 이수선 의원]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규정」에 근거하여 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조례가 아닌 자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은 향후 공직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공직선거법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이상육, 이수선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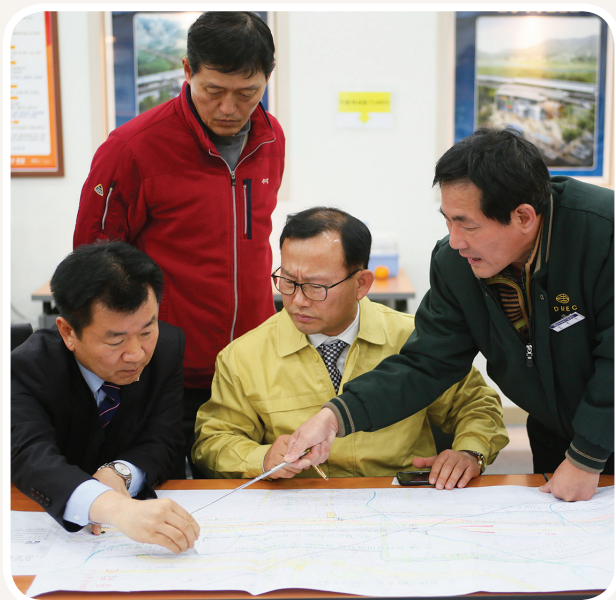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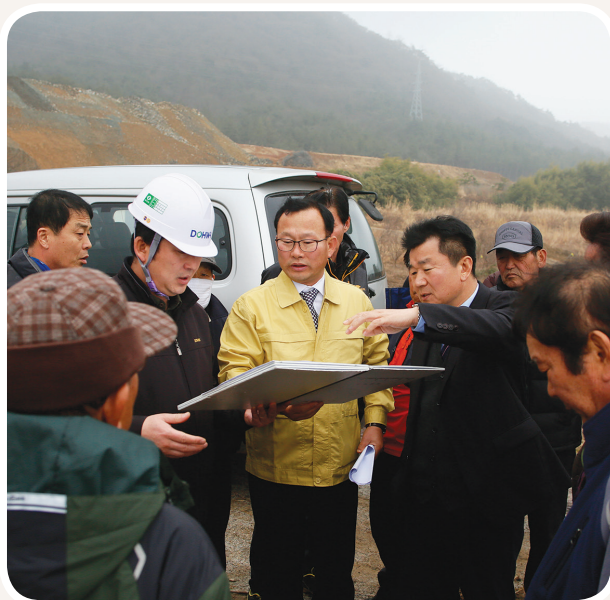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규정」에 근거하여 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조례가 아닌 자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은 향후 공직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공직선거법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 ▶ 수정가결 [이상육, 백현조 의원]

※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현 | 장 | 속 | 으 | 로

차일마을 민원 현장 (오토벨리 2공구) 점검



북구의회 이수선의장과 이상육 운영위원장은 차일마을 주민 10여명과 함께 1월 27일 오전 오토벨리로 2공구 지역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관계자와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차일마을 주민 엄우용(65)씨는 “오토벨리로 도로공사로 인해 평소 주민들이 이용하던 길이 단절되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통행로 박스가 기존 농로에서 멀리 떨어져있으며 진입로마저 꺾여있고 법면의 단차가 커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오토벨리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소장 및 오토벨리로 2공구 감리단에서 참석했으며, 시공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용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어렵고, 주민들이 원하는 통로박스를 개설할 경우 인근 지면보다 낮게 공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배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북구의회 이수선 의장은 공사관계자에게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농로인 만큼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며, 오토벨리 공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맞이 지역아동센터 방문



북구의회(의장 이수선) 의원들은 2월 11일 오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 2곳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관내 아동복지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수선 의장은 시설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아동센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므로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주길 바란다."고 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현 | 장 | 속 | 으 | 로

부산연제구의회 북구의회 방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장 주석수)의원 10명은 3월 9일 오후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를 방문하여 북구의회 의원들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사항들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제구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북구의회 방문은 국내 비교시찰의 일환으로 타 지방자치 단체의 우수 시설 및 의회를 방문·견학하여 의정활동 정보수집과 교류를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

북구의회 새봄맞이 환경정화활동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는 3월 13일 오후 강동 산하해변을 찾아 겨우내 해변에 쌓여있던 스티로폼 등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함께한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최근 울산 강동권 개발과 관련하여 각종언론과 기타 외지인들의 발길이 많은 지역인 만큼 다가오는 새봄을 맞이하여 더욱 깨끗한 이미지 확립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북구의회의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은 2008년부터 실시 해오던 것으로 제6대 북구의회에서도 분기별 1회씩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 | 장 | 속 | 으 | 로

제6대 북구의회 개원 기념식수



울산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는 4월 21일 오전 구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와 박천동 북구청장이 함께한 가운데 50년산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서 제6대 북구의회 개원을 기념하는 간소한 행사를 가졌다.

기념식수 후 이수선 의장은 북구의회 출범 18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8여년의 의정을 뒤 돌아 보고, 특히 제6대 북구의회가 19만 북구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푸른 정신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기념사를 마쳤다.

한편, 자리를 함께한 박천동 구청장은 "작고 내실 있는 오늘 행사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제고와 올바른 의회상 정립을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된 것 같다"며, 북구의회 개원 제18주년을 축하했다.

북구의회 관내 주요 사업현장 방문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는 4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현장,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 사면안정화 사업현장 등 당면현안 행정사무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펼쳤다. 특히, 울산 포항 복선전철화 사업은 2018년까지 송정정거장 등 4개역사에 교량 38개소, 터널 25개소로 총 2조 3,666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현장활동은 제153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으로 북구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해 사업추진 상황을 직접 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수선 의장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지난해 집중 폭우로 박상진 호수공원 경사지에 토사가 흘러내려 산책로 데크가 유실되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은 지역인 만큼 이번 사면안정화 사업으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현 | 장 | 속 | 으 | 로

북구의회 어르신 행복식당 배식 자원봉사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는 6월 29일 오전 북구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행복식당 배식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자원봉사활동에는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하였다.

한편 북구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관내 시설 및 어려운 이웃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5분·자·유·발·언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52회 임시회 (2015. 1. 29.)

＞ 발언요지 : 서민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서민증세,
무차별적인 서민세금 폭탄 즉각 중단하라!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박근혜 정권과 그 하수인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강진희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1894년 전복 정읍 고부 군수 조병갑의 세금 착취에 항거하여 일어난 갑오농민들의 저항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세목을 만들어 백성의 고혈을 쥐어쥔 조병갑 군수의 행태가 지금 박근혜 정권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민의 허리를 쥐어짜 재벌과 대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정책, 13월의 세금폭탄이 조병갑 군수의 세금 착취와 무엇이 다른지니까?

2015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배값을 인상하고,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오면서 노동자, 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감세해 주면서 부족한 재원을 노동자와 서민의 주머니에 의존하는 서민세금 증세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해 무산됐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설명한 뒤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민세금 인상 추진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 같아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 지자체가 요구하면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지방재정 문제를 호소하는 지자체에 그 책임을 미루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상황에서도 끝없이 서민세금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증세는 중단되어야 하며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부족한 재정난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 발언요지 : 서민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서민증세,
무차별적인 서민세금 폭탄 즉각 중단하라!

최근 2년 새 중산층의 세금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2014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소득 중간층(40~60%)인 3분위의 2013년 세금 납부액은 평균 101만원이라고 합니다. 2011년 84만원에 비해 20.2% 증가했습니다.

반면 최고소득층(상위 20%)인 5분위의 세금 납부액은 같은 기간 626만원에서 667만원으로 6.5%(41만원) 증가에 그쳤다. 중간층의 세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3.1배입니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율은 최저소득층(1분위) 증가율 7.7%에도 못 미쳤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불통의 정치, 재벌을 위한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서민증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감해 주면서 서민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서민증세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사가 말해 주듯이 대국민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정권은 지금이라도 부족한 재정을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채우겠다는 정책을 중단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노동자와 농민, 중소기업인들의 세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지지율이 날로 떨어지는 이유를 잘 보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서민증세를 반대 하며, 지금 즉시 폭력적인 서민증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5분·자·유·발·언

- ＞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 ＞ 발언일시 : 제152회 임시회 (2015. 1. 29.)
- ＞ 발언요지 : 수명다한 원전가동 중단 및 폐기 촉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새해 첫 임시회에 즈음하여 최근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며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반대와 폐기를 요청하는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이후 잦은 방사능 유출사고와 막대한 핵폐기물을 발생시켰던 월성1호기가 30년의 수명을 마치고, 2012년 이후 2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전력수급 문제와 경제성의 이유로 수명연장을 강행하려고 하고,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과 우리사회의 안전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하며 폐쇄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심사 안건이 상정되어 재가동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2/12)달로 결정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이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원전 재가동에 따르는 안전성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폐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52차례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던 노후 원전을 재정비하여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원전부품 납품비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재정비는 안전에 대한 불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동 중단을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한 우려와 함께 폐쇄결정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야기 하고 있는 전력공급에도 차질은 없습니다. 월성1호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 2년이 넘게 가동이 중단되어 있지만 전력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5년 후에는 전력 예비율이 30%에 육박한다고 하니 더욱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 발언요지 : 수명다한 원전가동 중단 및 폐기 촉구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경제성 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추진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최대 2,269억원 손해 보는 사업임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수명 연장을 하든 안하든 손해를 보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수명이 있고, 오래되면 고장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은 단순한 고장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장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수명을 연장해서 40년을 가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주국 캐나다도 수명연장을 포기했습니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중수로 원전입니다. 중수로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사양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1호기와 같은 모델인 캐나다의 젠틸리2호기 역시 안전성을 담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경제성 문제로 최근에 수명 연장을 포기했습니다.

월성원전1호기를 수명 연장하는 문제는 단지 지금 세대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주는 핵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킵니다. 지금도 우리는 처리 불가능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들을 핵발전소 임시저장고에 포화될 정도로 쌓아놓고 있지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경수 원전에 비해 5배나 많은 사용후 핵연료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월성원전1호기는 중수로 원전이라 삼중수소라는 방사성물질을 다량 발생시킵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소변에서 실제 삼중수소가 34.1Bq/L(리터당 배크렐)까지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의 원전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이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노후 원전 폭발을 통해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대재앙의 반복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30년 수명을 다하고도 8년째 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 고리 1호기는 각종 사고와 고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리1호기 반경 30km 안에는 부산과 울산 도심을 비롯해 34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시민들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니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지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 발언요지 : 수명다한 원전가동 중단 및 폐기 촉구

최근 “월성원전 민간 환경감시 기구”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의 71.2%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답변이 항상 우세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 대다수는 월성1호기에 사고가 나면 바로 직접적인 방사능 피해 구역 안에 살고 있으며, 특히 북구 지역은 월성1호기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과 직장 샴터를 버리고 영원히 떠나야 하며, 아이들이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 이름도 알 수 없는 각종 질병과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설계 수명 30년이 넘는 월성원전1호기와 고리1호기의 연장 가동은 선령이 다한 세월호 연장운항과 같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한다면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으로 위태로움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소중한 나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후원전 연장가동 반대에 북구주민 나아가 울산시민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52회 임시회 (2015. 1. 29.)

＞ 발언요지 : 이석기의원에 대한 대법원 내란음모 무죄판결, RO실체가 없다는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은 원천무효이다.



**존경하는 19만 북구주민,
박천동 구청장님과 600여 북구청 직원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주민들을 국가의 주인으로 여기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가를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세계 독재국가를 제외하고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는 모두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진보정당을 분명한 이유없이 해산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비판세력, 반대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국민과의 불통의 결과는 20%대로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보당을 강제 해산한 주요한 근거가 된 내란음모와 아르오(RO)에 대한 판결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2일 대법원은 내란음모를 무죄판결하고 이른바 아르오(RO)도 실체가 없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이 국정원 대선부정을 덮고 정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조작사건임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해산을 판결한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대법원판결이 나면 진보당을 해산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가 '주도세력'이란 비법적 용어로 지칭한 아르오(RO) 실체를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음모 역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가 내세운 주요근거와 핵심주장이 모두 엉터리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8인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통합진보당 해산이었습니까? 합리적 증거에 의한 법리 판단이 아닌 박근혜 정권을 감싸기 위한 충성 판결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10만 당원들을 능멸하며 국민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훼손시킨 공안정치판결입니다.

＞ 발언요지 : 이석기의원에 대한 대법원 내란음모 무죄판결, RO실체가 없다는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은 원천무효이다.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부정선거와 비선실세로 인한 정권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중복몰이와 진보정당 탄압에 앞장 선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과 10만 당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해산돼야 할 대상은 진보당이 아닌 박근혜 정권입니다. 부정과 비리, 무능과 무책임을 덮으려는 정치공작을 멈추고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결단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서민세금을 인상하고 재벌들의 편에 서서 부자감세를 하겠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닌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심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고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당원들은 지난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슴 속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깊이 반성하면서 진보정치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정당이 해산되는 것 자체로 죄스러움과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드리며 더욱 낮은 자세로 헌신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지고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해고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지만 서민과 노동자의 편에 서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움츠리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중복몰이에 정면으로 승부하며 시민들의 삶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노동자 서민의 편에 서서 폭력적인 서민세금 인상, 일자리를 빼앗는 재벌의 횡포, 재벌을 위한 경제 정책만을 고집하는 것에 맞서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자유발언을 통해 하소연하고자 하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 발언일시 : 제153회 임시회(2015. 4. 20.)
- ＞ 발언요지 : 4.24 민주노총 국민총파업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모든 국민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승찬 의원입니다.

2015년 새해부터 온 나라는 담뱃값 인상과 세액공제로 술렁이며 박근혜정부의 '반 노동자 서민, 친 재벌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적 요구는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고, 진보당 강제해산으로 나타난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공적연금에 대한 공무원과 국민들의 요구는 끝나지 않고 있으며, 전국 경향각지에서 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대해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완화, 비정규직 확대, 임금 축소, 노동조합 탄압 등 노동자를 착취하고 재벌을 위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민세금 인상,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청년실업문제, 노인일자리 요구 등 심각한 사회문제 속에서 갈수록 일자리는 사라지고 서민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결국 민주노총은 국민총파업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자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 2년동안 국민의 호소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통의 정치를 고집하면서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민생은 파탄 나고 있으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 구조는 심각해지는 마당에 민주노총은 국민총파업을 결정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현 사회 현실에 대한 반영이며 국민과 시대적 요구입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총파업을 하려는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성완중 게이트로 정치적 불신만 높이고 있고,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산적한 국내 문제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무시한 채 해외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나라 안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들의 울부짖음이 이어지고, 민주주의와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성완중 게이트로 정치권에 큰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마당에 말입니다.

＞ 발언요지 : 4.24 민주노총 국민총파업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모든 국민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600여 공무원과 19만 북구 구민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 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란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96년 정리해고, 파견근로제 추진 당시 보다 훨씬 개악된 심각한 노동악법입니다.

민주노총 국민 총파업은 제도의 완화라는 이름하에 해고는 쉽게, 임금은 깎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한마디로 노동자를 죽이는 법과 정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을 무조건 개악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맞서 공적연금을 강화하려는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부자감세는 거부하면서, 재정확보를 위해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기 보다는 국민연금을 인상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악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일자리를 위해 정규직이 양보하라고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이란 이름으로 아버지의 일자리를 빼앗아 아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묘한 선전논리로 국민을 우롱하고 노동자와 국민을 갈라놓으려는 이간책입니다. 결국 정규직의 일자리를 축소하겠다는 것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주에게 해고의 권한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끊임없이 평생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만드는 구조개악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재벌만을 위한 정책인 것입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파견근로의 전면허용이고,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데, 결국 모든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생존권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치솟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그나마 최저임금도 적용 되지 않는 노동자가 20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일본도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임금인상을 촉구하였습니다. OECD 하위권 수준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경제 민주화이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해 시행령을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세월호 진상을 은폐하려는 정부 시행령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 발언요지 : 4.24 민주노총 국민총파업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모든 국민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온전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합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배상금, 보상금이 아니라 올바른 진상규명이고 안전한 사회입니다.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국민총파업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정권은 필요 없습니다. 자자손손 재벌과 기득권세력만을 위한 정권이라면 다수의 노동자, 서민에게는 필요 없는 정권입니다.

세월호 참사, 민주주의 파괴와 진보정치 탄압, 4자방 비리와 성완종 게이트, 민생파탄과 노동착취악법에 맞선 4.24 민주노총 국민총파업 결정은 나라 경제와 민생을 위한 것입니다.

부정부패한 정치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국민을 무시하는 불통의 정치에 맞선 국민총파업은 반드시 성사되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역사의 전진에 기관차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총파업 성사를 위해 우리 사회에 양심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도록 호소합니다.



5분·자·유·발·언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53회 임시회 (2015. 4. 20.)

＞ 발언요지 : 진상규명 방해하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안 폐기!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 촉구! 모욕적인 배보상 절차 중단!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강진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으며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생때같은 아이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하나 둘 잃어가야만 했던 그 때 모두가 이야기했습니다. 4·16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1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아직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시스템 마련은 커녕 아직 참사의 진실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런 1년을 맞으며 참사보다 더한 참담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더딘 진상규명의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의해 비롯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예의와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참사 1년을 맞으며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격려와 보살핌에 보다 더 민감하고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참사 1년이 다가오자 뜬금없이 4억이니 7억이니 하는 배보상 기준과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 앞에 돈을 흔드는 격입니다. 이 무슨 짓입니까?

또한 국민 다수가 원하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공식결정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인양계획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인양 비용에 포커스를 맞춘 저질스런 언론플레이로 세월호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 품으로 보내달라는 국민의 절규, 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가야만 했는지 알고 싶다는 세월호 가족들의 간절한 요구를 어떻게 이토록 비열하고 폭력적으로 묵살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부라면 참사 1년을 맞으며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내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특별법 시행령안을 통과 시키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반쪽짜리 법이었지만 세월호 가족들의 대승적 양보를 거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충분한 인력, 예산 및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4·16 참사에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가족추천으로, 진상규명소위 위원장을 야당 지명으로 하고, 다수의 민간 직원을 채용하는 등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 발언요지 : 진상규명 방해하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안 폐기!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 촉구! 모욕적인 배보상 절차 중단!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위임·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전체와 소위원회 업무 전체에 대한 기획, 조정권한을 부여받는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담당관 등의 자리에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들이 자리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상규명의 사업내용조차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 등으로 극단적으로 축소되어 있고 직원의 수 또한 법률에 비해 3/4으로 줄여 사실상 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수사권한을 주고, 피고인에게 판결을 맡기겠다는 식인데 세상에 이런 터무니없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정부 시행령안은 참사의 진실과 진상보다는 참사의 책임자이자 조사의 대상으로 되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비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방탄시행령, 조사방해 시행령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상규명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안전한 새 사회로 가자는 국민의 열망을 어떻게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정부가 이러고 있으니 세월호 가족들이 기댈 곳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지난 4월 2일 세월호 가족 52명이 삭발을 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416시간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한 엄마 아빠가 된 것도 억울한데 부끄러운 엄마 아빠가 되기를 강요하는 무례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부를 향해 목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까지 고통 받아야 합니까?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세월호 가족들의 세가지 요구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정부 시행령을 즉시 폐기하고 최소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시행령안을 수용, 공포해야 합니다.
2. 세월호에 실종자 9분과 참사의 진상이 있습니다. 정부는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3.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모든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은 세월호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 > 발언일시 : 제153회 임시회 (2015. 5. 1.)
- > 발언요지 :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 1차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북구청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기존의 직영운영 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고자 위탁대행료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과 사업장에만 실시해오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범위를 단독주택까지 확대 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북구청 추진배경 설명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등 인력감소에 따른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민간 위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음식물 폐기물 수거체계를 구청 직영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환경미화원의 효율 적인 인력운영과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에 따른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북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인건비 3억원(5천만원×6명), 차량유지비 2천7백4십6만9천원으로 연간 3억2천7백4십6만9천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3명을 포함하여 총9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은 출근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새벽3시에 작업을 하시고 있습니다. 야간 작업에 대한 수당도 없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 민간위탁 비용으로 2억2천3백9십4만6천원 (967톤 × 231,632원)을 대행료로 지급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3억2천7백4십6만9천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을 2억2천3백9십4만 6천원으로 대행하게 되면, 표면상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량운행비를 제외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환경미화원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고 업무 만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는 인원을 거리환경미화로 돌린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이지만 전체적으로 정원을 53명에서 50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축소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예산을 들여 대행함으로 대행업체 노동자에게 저임금 고노동 착취를 하게 만듭니다.

＞ 발언요지 :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반대합니다.

똑같은 일을 9명에서 6명이 한다는 것도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지만, 구청 직영시 받는 임금의 65%를 받고 대행업체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에 어긋나기도 합니다.

위탁운영 업체의 임금은 (대략) 34,000천원 ~ 38,000천원이 됩니다. 대행업체인 춘산환경은 4명, 동천기업은 2명이 인원을 확충한다고 하지만 결국 구청직영 9명의 일을 대행업체는 6명이 하게 됩니다.

특히 춘산환경의 경우 3명만 우선 고용하고, 1명은 일을 해보고 고용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결국 5톤 차량은 2명이, 비좁은 골목을 담당해야 할 1톤은 1명이 운전과 음식물 폐기물 수거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시가 아니라 밤 12시부터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임금은 적게 받으면서 일은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공공 기관에서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할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민간위탁도 비정규직의 문제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일을 대행업체를 만들어 위탁 운영함으로써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아니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임금은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착취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저임금 노동착취를 행하는 민간위탁은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정원이 56명이고, 현원은 50명이라고 합니다.

박천동 구청장은 취임 초에 53명의 정원을 유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원을 축소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인원을 충원하여 분담하여 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힘든 일은 위탁으로 돌리고 정원은 줄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미화원 업무는 도시가 발전되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그 어떤 업무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정해진 정원을 채워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고, 구청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예산절감과 인원 수급의 이유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문제는 결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운반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대행업체에서 구청직영 때처럼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행료를 제대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발언요지 :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반대합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채워 할 일을 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못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라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유지하고, 일한 만큼 국민들이 대우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마저 정규직의 자리를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채워나간다면, 그 자리는 더욱 고된 노동과 저임금으로 물리게 됨은 물론이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자녀세대에게는 미래에 드리우진 어두운 그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고용불안에 내몰린 비정직 가장들은 자녀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저출산으로 이어져 미래 동력인 인력난으로 이어져 앞으로의 사회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산만큼은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에서 바라보는 북구의회



울산북구의회 제152회 임시회 개회

기사등록 일시 [2015-01-29 17:44:33]

【울산=뉴시스】고은희 기자 =29일 울산 북구의회 본 회의장에서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과 박천동 북구청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52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개회되고 있다.

이번 제152회 북구의회 임시회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중국 비성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의한다.
2015.01.29. (사진=울산 북구의회 제공)

울산제일일보

2015년 02월 05일 목요일 006면 사회

“창의놀이터, 일조권 침해”

화훼농장 운영장 민원 제기

북구 “미적용 대상지역에

일조권 최대한 보장한 설계”

울산시 북구가 친환경 어린이 놀이공간을 표방하며 중산동 옛 음식물자원화시설 자리에 건립하고 있는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물 때문에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물 뒤편에서 농소화훼작목회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선 대표 등 3명은 4일 오후 **북구**의회를 찾아 이같이 주장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김 대표 등은 이날 **북구**의회 이수선 의장과 이상욱 운영위원장을 찾아 “앞에 위치한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물로 인해 농장이 음지가 됐다”며 “이 때문에 하우스 안

에서 자라는 꽃의 발육상태가 나빠져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일조권 적용 대상지역이 아니고 기존 음식물자원화시설보다 3.1m 정도 낮게 건축됐다”며 “옥상도 투명 강화유리로 마감해 일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설계됐다”고 해명했다. 또 “주장하고 있는 일조권 침해는 법적검토 뿐만 아니라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을 때 화훼단지에서 제기했던 악취민원이 창의놀이터 건립으로 해결됐다”고 반박했다.

북구는 심각한 악취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됐던 중산동 829번지 옛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천223㎡) 규모로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건립하고 오는 4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윤왕근 기자

U울산매일

2015년 02월 05일 목요일
012면 사람



이수선 북구의장, 농소화훼 작목회 민원 청취 북구 중산동 농소화훼 작목회 대표 김수선의 3명은 4일 북구의회 이수선 의장과 이상욱 운영위원장을 찾아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시설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경상일보

2015년 02월 12일 목요일
016면 사람



울산 북구의회(의장 이수선) 의원들은 11일 지역아동센터 2곳을 방문해 아동 및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언론에서 바라보는 북구의회

울산광역시매일

2015년 02월 26일 목요일
008면 사람들



한일이화어린이집 북구의회 견학

북구 연암동 한일이화어린이집 원생 23명은 25일 오전 10시 인솔교사 2명과 함께 북구의회를 견학했다.

경상일보

2015년 03월 10일 화요일
016면 사람



울산시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는 9일 방문한 부산시 연제구의회(의장 주석수) 의원 10명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사항들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제일일보

2015년 03월 16일 월요일 008면 사람들



북구의회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지난 13일 오후 강동 산하해변을 찾아 겨우내 해변에 쌓여있던스티로폼 등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북구의회 봄맞이 환경정화

울산시 북구의회 의장 이수선은 지난 13일 오후 강동 산하해변을 찾아 겨우내 해변에 쌓여있던 스티로폼 등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함께한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다가오는 새봄을 맞이해 더욱 깨끗한 이미지 확립을 위해 진행됐다. 산하해변은 최근 울산 강동권 개발과 관련 해 각종언론과 기타 외국인들의 발길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한편 북구의회 의 자원봉사활동은 2008년부터 실시 해오던 것으로 제6대 북구의회에서도 분기별 1회씩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윤왕근 기자

울산신문

2015년 04월 21일 화요일
015면 사람



북구의회 임시회

박천동 북구청장은 20일 개최한 제153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2015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배경 설명을 하고 있다.

언론에서 바라보는 북구의회

경상일보

2015년 04월 29일 수요일
016면 사람



울산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는 28일 울산~포항 복선 전철화 사업현장과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사면안정화 사업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울산제일일보

2015년 05월 01일 금요일 004면 정치

북구의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가결

울산 북구의회는 30일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5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발의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무소속 강진희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구청장의 책무, 분석평가 대

상, 시기와 작성방법,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해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게 했다.

조례는 관계기관 협의 및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윤왕근 기자

울산제일일보

2015년 05월 04일 월요일
004면 정치

북구의회, 추경 2479억 의결 당초 보다 241억여원 늘어

울산시 북구 살림살이 규모가 2천479억 원으로 확정됐다.

북구의회는 지난 1일 제1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북구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2천479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241억4천800만 원이 늘어난 규모다.

의회는 이번 추경을 통해 쇠부리체육센터 건립사업비 27억원과 달천 편백산림욕장 및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로 개설사업비 25억 원을 추가 승인했다.

또 신규사업 6·25참전기념비 건립(2억원), 산음저수지 주민쉼터 조성(4억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억8천만원) 등을 의결해 북구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게 됐다.

의회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안을 처리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윤왕근 기자

울산 북구의회 제153회 임시회 폐회

부울경뉴스 | webmaster@bulgunews.com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이수선) 제153회 임시회가 1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북구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2,479억 원 규모의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했다. 또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한편 본회의에서 윤치용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무의 민간위탁 반대의 입장으로 발언을 하였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저작권자 © 부울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언론에서 바라보는 북구의회

울산신문

2015년 05월 07일 목요일 015면 사람



동천고등학교 1학년 학생 17명은 직업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6일 북구의회를 방문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원 역할체험을 실시했다.

동천고 1학년 북구의회에서 직업현장 체험학습

울산 동천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술교사 지만규) 17명은 직업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6일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를 방문했다. 이날 농소3동 지역구인 이수선의장과 윤

치용의원도 함께해 학생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원이라는 직업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등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북구의회 다목적실에서 의회홍보영상물 시청과 간단한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직접 의장석과 의원석, 집행공무원석에 앉아 발언을 해보는 등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역할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윤지이기자 usyja@usanpress.net

울산제일일보

2015년 05월 27일 수요일
009면 사람들



북구청 어린이집 의회 견학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원장 박서영) 원생 23명이 26일 인술교사 3명과 함께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를 견학했다.



2015년 상반기 포토의정



의원간담회 (2015. 1. 20)



자연보호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2015. 1. 23)



북구 신축 성혜마을회관 준공식 (2015. 2. 12)



2015년 상반기 포토의정



제3대학 제8기 입학식 (2015. 3. 3)



어린이집-경로당 1,3세대 결연 협약식 (2015. 3. 11)



제2기 세대공감 창의놀이터기 양성과정 수료식 (2015. 3. 12)



의원직직원 합동연수 (제주) (2015. 3. 17)



나무심기 행사 (2015. 3. 25)



한국자유총연맹 울산 북구지회 결성 (2015. 3. 27)



2015년 상반기 포토의정



제3회 연포사랑 벚꽃길 등반대회 (2015. 4. 4)



자율방범연합회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2015. 4. 12)



의원간담회 (2015. 4. 13)



북구 새마을운동 활력화 다짐대회 (2015. 4. 16)



양정당로당 경로잔치 (2015. 4. 23)



어린이날 행사 (2015. 5. 5)



2015년 상반기 포토의정



제1회 북구 봄꽃프레이아기 개관식 (2015. 5. 11)



자원봉사자 홀타운 리호 현판 제막식 (2015. 5. 13)



북구의 책 선포식 (2015. 5. 29)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2015. 5. 29)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개소식 (2015. 6. 9)



북구새마을 텃밭 감자수확 (2015. 6. 22)

의회 민원상담 안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주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
내용

10:00 ~ 17:00 (토, 공휴일 제외)
민원인과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직접 상담 또는 현장방문
각종 민원 불편,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각종 여론 수렴
※ 의원 부재 시에는 전문위원실(5층)에서 접수
전화: 241-8982 팩스: 241-8979

농소2·농소3동	효문·양정·염포동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2·농소3동	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안승찬	윤치용	백현조	정복금
의장실 : 241-8900 010-2833-1929	부의장실 : 241-8910 010-8610-4748	사무실 : 241-8930 010-5535-2362	사무실 : 214-8950 010-6587-1287	사무실 : 241-8960 010-5231-7321	사무실 : 241-8940 010-3801-8364	사무실 : 241-8920 010-3446-2002

※ 의회 방문 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담시간을 사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화052) 241-8971~8975

FAX052) 241-8979

주소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층

홈페이지council.bukgu.ulsan.kr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북구의회는 주인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북구의회는 주민여러분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의회방청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간단히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시면

회의진행과정을 생생하게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의회사무과(241-8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새시대를 열어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층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